

7.4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의미와 한계

김형철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위원)

- I. 위기의 한나라당, 그 원인과 당면과제
- II. '쇄신' 과 '변화' 의 실험대로서의 7.4 전당대회
- III. 홍준표 체제의 친서민 정책은 과연 가능할까?
- IV. 민주당 전당대회에 주는 시사점

I. 위기의 한나라당, 그 원인과 당면과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와 4.27재보궐 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였다. 두 번의 선거 참패는 단순한 선거패배의 의미보다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패배와 정권재창출의 실패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분당 을' 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 결과로 한나라당 안과 밖에서 권력지형의 변화를 동반하는 '쇄신' 과 '변화' 의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의 위기에 대한 원인은 크게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에 의한 반(反) MB, 반(反) 한나라당 민심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가져온 당내 계파갈등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무시하는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임으로써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4대강 공사반대 그리고 무상급식 도입 등 국민의 요구는 권위주의 시기에나 존재할 법한 공안기구와 컨테이너산성에 의해 가로막혔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제이다. 또한 한 정당의 지속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반응과 부적응의 모습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낳았다.

둘째, 당내 계파정치의 심화는 우리나라 역대 정당들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따라

서 당내 계파정치가 한 정당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계파에 기초해서 15년간 지속된 유일한 정당이지만 최근에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내의 계파정치는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나라당의 계파정치는 극단적인 대결 현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18대 총선에서의 후보공천,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과 관련한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쉽게 봉합될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었다. 이러한 계파간 갈등의 골은 한나라당이 의회 내에서의 다수라는 논리를 통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듯이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파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현재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차원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4.27재보궐 선거 후에 실시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도 성향의 황우여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당 쇄신과 변화를 위한 직접적 행동을 취하였다.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했던 ‘반값 등록금’ ‘법인세 감세철회’ 문제 등에 대해 당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보를 견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7.4 전당대회를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실험대로 선택 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스스로 쇄신하고 있음을 검증받고자 하였다.

II. ‘쇄신’ 과 ‘변화’ 의 실험대로서의 7.4 전당대회

작년 6.2지방선거에 이어 4.2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반전을 꿈꾸며 7월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친이계와 친박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홍준표 의원이 4만1666표(25.5%)를 얻어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친박계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예상 밖의 선전으로 3만2157표(19.7%)를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친이계의 후보인 원희룡 의원(2만9086표 · 17.8%)은 나경원 의원(2만9722표 · 18.2%)에 밀려 4위를 기록하여 최고위원이 되었다.

<표 1> 한나라당 전당대회 개표결과

| 순위 | 이름 | 득표율 |
|----|-----|-------|
| 1 | 홍준표 | 25.5% |
| 2 | 유승민 | 19.7% |
| 3 | 나경원 | 18.2% |
| 4 | 원희룡 | 17.8% |
| 5 | 남경필 | 9.1% |

| | | |
|---|-----|------|
| 6 | 박진 | 5.5% |
| 7 | 권영세 | 4.2% |

이러한 개표결과는 한나라당이 당면과제로서 제기한 ‘쇄신’ 과 ‘변화’ 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끌 당대표에 7명의 후보들이 입후보하였는데, 이들 중 어느 계파에도 눈치 보지 않는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지도부는 40~50대로 구성됨으로써 보다 젊은 한나라당으로의 변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7.4 전당대회는 지도부의 인적쇄신의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기대에 부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성이 어떠한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기대를 높여 준 점은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시한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홍준표 대표는 경선과정에서 당당한 대표, 계파 초월, 사회양극화 해소, 부패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친서민’ 정책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중 상당수도 이명박 정부가 지속해 온 성장 위주의 ‘친기업’ · ‘친시장’ 정책기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쇄신’ 과 ‘변화’ 의 실험대로서 7.4 전당대회를 평가할 때, 한나라당의 ‘쇄신’ 노력이 엇보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국민들은 전당대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벌어진 웃지 못 할 상황은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당 쇄신을 주장한 소장파들은 전당원투표제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을 주장하였으나 계파간의 이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전국위원회는 선거인단을 21만명으로 늘이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30%로 한 새 당헌의 통과 과정에서 불참자에 대한 위임장 의결이라는 웃지 못 할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며, 법원에서는 헌법 원칙과 정당법 위배를 이유로 무효결정을 내렸다.

또한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구태정치의 행태는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즉, 친이계의 원희룡 후보 지원 회동설, 친박계의 홍준표 후보 밀약설 등 흑색선전과 더불어 권력기관에서의 공작정치설과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권 거래설 등 이러한 ‘설’ 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경선과정 내내 불거져 나왔다는 것은 당초 ‘쇄신’ 과 ‘변화’ 의 실험대로서 전당대회의 위상을 한나라당 스스로가 낮

했으며,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는 21만명의 선거인단 중 4분의 1인 25.9%라는 낮은 투표율에서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적 비전의 제시를 통한 경쟁보다는 계파 줄서기에 몰입하는 구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와 4.27재보궐 선거는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쟁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요구가 ‘쇄신’ 과 ‘변화’ 를 당면과제로 제시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단지 구호 또는 수사로서만 존재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를 이끌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과 당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 쇄신은 크게 인적 쇄신을 통한 외형상의 변화의 차원과 정당의 지향적 가치와 정책적 쇄신을 통한 내용상의 변화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물론 두 차원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는 인적 쇄신이라는 외형상의 변화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상의 ‘쇄신’ 과 ‘변화’ 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홍준표 체제의 친서민 정책은 과연 가능할까?

홍준표 대표 체제의 탄생은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홍준표 대표의 과거 정치행보가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비주류였다는 점에서 계파정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둘째,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아파트 법안, 이자상환제 등 친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대표 경선기간 내내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이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도 전당대회기간 내내 복지와 서민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계파활동에 치중하면 공친을 주지 않겠다’ 라고 언급하면서 계파정치의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결식 국민에 대한 쌀 전면 무상공급, 7세 이하 어린이 국가보육, 최고이자율 30% 제한 등 파격적인 친서민 정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7월 10일 진행된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은 사안에 따라 1~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학 등록금 완화, 대기업 규제 강화뿐 아니라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던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실행여부를 떠나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쇄신’ 과 ‘변화’ 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내년 총선공천과 관련되어 홍준표 대표의 계파배제 발언은 친박계와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사무총장 등의 당직인사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홍준표 대표체제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주류(친이계)와 보수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좌클릭’ (?) 경향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서민정책 강화를 좌클릭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 이며, 자신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좋은 포퓰리즘’, 즉 ‘우파 포퓰리즘’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보수 엘리트에 의해 지탱되어온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

홍준표 대표체제의 친서민 정책의 가능성과 전망이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파의 이익을 초월한 사회적 편익을 위한 정치를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파배제 발언에 대한 각 계파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든 계파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거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단지 구호로서만 또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언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친서민 정책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실험대인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반(反) 서민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친서민’ 을 외치면서 한진중공업 청문회 불참 등 정작 서민이 당하는 부당성을 외면 또는 회피하고 있다. 다시금 ‘역시나 한나라당이야’ 라는 국민의 실망과 더불어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파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홍준표 대표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친서민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동력이다. 예전과 같이 이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쇄신과 변화의 상징으로서 친서민 정책의 실현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취임 이후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발걸음보다 당직인사, 내년 총선공천과 전략 등 당내 정치와 다가올 총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들은 친서민적 정책의 추진 전망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쇄신’ 과 ‘변화’ 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IV. 민주당 전당대회에 주는 시사점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이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결과처럼 세대교체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민주당 내의 계파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하던 정책적 지향성이 유지 또는 변화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우려는 민주당이 4.27재보궐 선거 승리 후 대세론에 안주하며 ‘쇄신’ 과 ‘변화’ 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그리고 책임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서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선 규칙의 마련과 후보자들 사이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화합되고 통일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선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계파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과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체성, 노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권 경쟁에 있어 지역이나 인물에 기초한 계파 간 경쟁이 아닌 성실히 준비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07/12)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